

기초의회의원의 정치적 태도와 정당공천에 관한 사례 연구

Local Councilors' Political Attitudes and Party Nomination:
A Case Study of Ulsan Metropolitan Government

최 창 수*

Choe, Chang-Soo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II.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의 틀
- III. 정당신뢰와 의원효능, 그리고 정당공천에 대한 지방공직자의 인식
- IV. 정당공천과 지방의회의 질적발전
- V. 맺는 말: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의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 이래 지속되어온 이슈였다. 그동안 정당공천은 폐지론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 200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회 의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선정해 기초의원들의 정치효능과 정당신뢰, 그리고 정당공천이 지방의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방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실험적 연구이다. 전직 기초의원과 공무원들은 유사한 태도를 보인 반면, 현직 의원들과 대조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정당공천에 대한 폐지의견이 우세한 가운데에서도 기존의 주장과 달리 정당공천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제한된 표본수와 지역으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는 있으나 정당공천에 대한 지방공직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논문 접수일: 2007년 11월 10일

*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부교수

□ 주제어: 지방의원 정당공천, 정치적태도, 정치효능, 정치신뢰

Party nomination for elected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the controversial issue since 1995. While pros and cons have provided their own rationale, party nomination has been expanded to lower level local councilors in 2005.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examine political attitudes, perception of local officials on party nomination and its relation to local council.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show that perceptions of appointed officials and former local councilors are similar in many aspects, whil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incumbent elected officials. It is an interesting finding that party nomin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 while local officials have been known to oppose party nomination.

□ Keywords: Political Attitudes,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 Party Nomination

I. 문제의 제기

지난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제1차 전국지방동시선거 이후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이슈 중의 하나는 정당공천제이다. 폐지론과 찬성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당공천 폐지론은 지역주의 정당구조와 일반시민의 낮은 정당참여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정당공천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반면 정당공천 찬성론은 정당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정치이슈의 명확화, 민선공직자 후보의 검증 및 주민의견의 수렴, 주민들의 참여 확대 등의 기능을 통해 다른 조직이나 기관이 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학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특히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온 지방의 민선공직자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당공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한 여러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정당공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01년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리서치가 일반시민과 전문가 등 총 1,400명을 표본추출 하여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일반시민의 54.6%, 전문가

의 77.3%가 정당공천에 반대하였고, 2005년 9월 한국행정DB센터가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공천에 대한 반대의견이 응답자의 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용학 2007에서 재인용).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주장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도 정당공천의 대상이었던 기초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¹⁾

이러한 가운데 중앙정치권은 지난 2005년 정당공천을 기초의회의원들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5·31 지방선거는 지방의 4개 민선공직 모두에 대해 정당공천이 도입된 가운데 실시되었다. 관련법 개정 당시 제기된 개정 취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나(송광태, 2005:160), 폐지론자들은 중앙정치권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 없이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정당공천을 확대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육동일, 2006:6). 명목상으로는 2005년의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즉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 확대와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원정수 감축과 의원 유급제 실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지역사회의 유능한 인력을 지방의회로 유입시킴으로써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정당공천제도는 실제 지방의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방의회의원들과 상당수의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사례연구로서 실험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실험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이제 겨우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고, 또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모두 포함하지 않고 사례선정을 통한 인식조사결과에 근거해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의 관련법 개정을 전후하여 정당공천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음에도 그 대부분이 규범적 차원의 논의였으며 특히 정당공천이 확대 적용된 5·31 지방선거 이후 정당공천이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5·31 지방선거 이후 실제 지방의회가 질적으로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만큼 정당공천과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공직자, 즉 전·현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시각을 통해 기초적인 판단을 시도해 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1) 정당공천과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대에 관해서는 주용학(2002)의 논문 참조.

II.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의 틀

1. 정치적 태도와 선행연구의 검토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던 문제는 바로 지방의원들의 질적 수준에 관한 문제였다. 정치학적 시각에서 볼 때 지방의원들의 질적 수준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정치학적 시각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질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태도로 보고 정치적 태도(political attitude)를 소위 정치효능(political efficacy)과 정치신뢰(political trust)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정치효능과 정치신뢰는 1960년대에 특정 정치체제 구성원들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측정을 통해 그 체제의 정치적 특성을 규명하기 개발된 이후 최근 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정치신뢰는 정부, 정치인 혹은 정치체제에 대한 개인의 믿음 정도를 말하고 정치효능은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치적 자신감을 말하며 정치투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안병만, 1983:136~137).

정치신뢰와 정치효능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Almond와 Verba(1963)는 강한 정치신뢰감과 정치효능감이 안정된 민주주의에서 이상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본적인 정치신뢰 지표는 정부를 평가하는 매우 실질적 구성물이며 정부와 공직자의 성과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Erickson & Tedin, 2001:158; Abramson & Finifter, 1981:30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초의회의원들의 정치적 태도는 지방의회의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안정된 민주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지방의회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육동일, 2006; 송광태, 200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원들의 역할인지가 부족하고 직무관련 학습이 부족하며, 의정활동의 적극성도 미흡하여 전문성이 낮은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등의 제도적 요인도 전문성 제고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최봉기, 2005:13~17). 또한 최홍석(2004:143~151)은 지방의회 권능의 효능성(efficacy) 부족을, 김상미(2006)는 지방의회의 영향력의 부족을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방의원들의 정치효능과 정치신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반면, 정당공천과 관련해서는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당공천의 폐지 내지 유보를

주장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김순은, 2002:53; 주용학, 2002; 이상팔, 2004:59~61; 송광태, 2005:174; 육동일, 2006).²⁾ 5·31 지방선거 실시 이후 실시된 연구로서 주용학(2007)은 5·31 지방선거 결과 분석에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측으로 인한 정당공천의 부정적 측면이 선거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어 정당공천이 예상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묵(2007)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5·31 지방선거 결과 분석에서 예비후보제도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기초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측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분석하였다. 황아란(2007)은 지난 해 5·31 지방선거 결과의 집합자료 분석을 통해 2005년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중선거구제도가 기대했던 효과를 산출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황아란(2002 & 2007)과 이상묵(2007)의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가 기초자치단체장에 관한 정당공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로 집합자료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방의회의 발전에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전·현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정치효능과 정치신뢰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³⁾ 이 문제를 탐구하는 목적은 정당공천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실제 지방공직자의 시각에서 정당공천이 지방의회의 발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2. 분석모형과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정치효능과 정치신뢰의 개념을 원용하여 지방공직자들의 정당신뢰와 의원 능력에 대한 효능으로 개념들을 구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질적 수준의 문제이고, 둘째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제도적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지방공직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지방의회와의 관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행태적 접근법

2) 이 논문의 목적이 정당공천에 관한 이론적 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공천의 찬반에 관한 이론적 검토는 생략함. 이에 대해서는 육동일(2006)의 10~12 페이지, 김병준(2002)의 259~274 페이지, 이승중(2005)과 이기우(2005)의 글 등을 참조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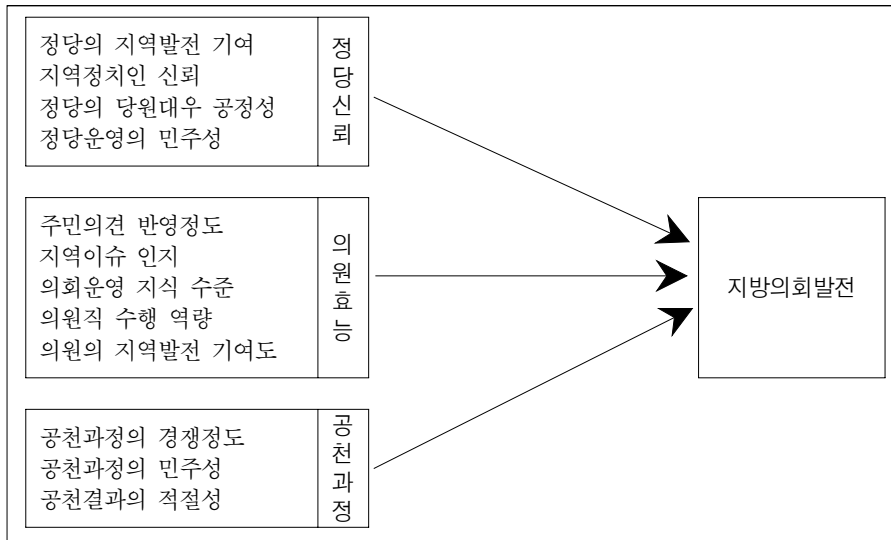
3) 지난 2002년의 6·13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모종린과 전용주(2004)는 후보경선을 거친 후보자가 본선거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cognitive-behavioral approach)에 기초하여 지방공직자의 정치적 태도(정당신뢰와 의원효능감)와 정당공천이 지방의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지방공직자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감과 의원들의 효능감은 정당공천과 함께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가설과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의원들과 공무원의 정당에 대한 신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의원들의 효능에 대한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정당공천은 지방의회의 발전과 부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림 1> 분석의 틀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 즉 정치신뢰와 정치효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지표들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정치적 태도, 즉 정치신뢰와 정치효능의 측정에는 미국의 사회조사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개발한 것과 David Easton(1967)이 개발한 정치효능 항목을 발전시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치적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들을 소개하고 있는 J. Robbins 등의 저서(1999)에 소개되어 있는 측정도구들도 위의 두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변형 발전시킨 것들이 대부분

이다. 우리나라의 연구들도 이러한 지표들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농촌주민의 정치적 태도를 연구한 안병만(1983)은 정치효능의 측정항목으로 정부이해감, 개인의 정치영향에 대한 확신감, 대중의 정치무력감을 정치신뢰의 측정항목으로 정치인신뢰, 정책신뢰, 정부능력신뢰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는 정치효능감의 측정변수로 주요 정치문제 인지, 다양한 정부영향력 행사방법인지, 정치문제 교육정도, 공식수행능력, 공식자의 시민무관심, 선거후보자의 주민의사 무관심, 지역주민 의사반영 기회 부족, 공무원의 세금 낭비 등을, 정부신뢰의 측정변수로 국가지도자 신뢰, 국회신뢰, 행정부 신뢰, 사법부 신뢰 등이 사용되었다(박희봉·이희창,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당신뢰를 구성하는 변수로서, '정당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정치인 신뢰', '정당의 당원에 대한 대우 공정성', '정당운영의 민주성'을 선정하였고, 의원효능감을 구성하는 변수로 '주민의견 반영정도', '지역이슈에 대한 인지', '의회운영에 관한 지식', '의원직 수행 역량', '중앙정당으로 부터의 자율성', '의원들의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당공천의 구성변수로는 '공천과정의 경쟁정도', '공천과정의 민주성', '공천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4점 척도의 설문을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울산광역시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원 200명⁴⁾을 대상으로 2007년 4월 한 달 동안 실시하였다.⁵⁾ 회수된 설문지는 총 104부로 회수율은 52.0%였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7부를 제외한 9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는 현직의원 27명, 전직의원 23명, 공무원 47명 등 모두 97명이었다. 수집된 조사결과는 SPSSPC Window 11.0을 이용해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 분산분석(ANOVA),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후 분석과정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원효능 요인의 구성변수 중 하나였던 '중앙정당으로 부터의 자율성'은 별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어 이 변수를 제외하였다(〈표 1〉 참조). 선정된 변수들의 내적 타당도(rel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구해보았는데 정당신뢰 요인은 α 값이 .8536, 의원효능 요인은 α 값이 .8417, 정당공천 요인은 α 값이 .8055로 모두 .8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로서의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⁶⁾ .800 이상의 상관계수는 나

4) 참고로 울산광역시내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개로 5·31 지방선거에서는 16개 선거구에 총 102명의 기초의원 예비후보자가 등록하였고 기초의원총수는 50명이다.

5)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종범의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타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erry & Feldman, 1985: 42~43; Knoke, Bohnstedt, & Mee, 2002:268~269).

<표 1> 독립변인 요인분석 결과

변 수	정당신뢰	의원역량	정당공천
정당의 지역발전 기여도	.733	.443	.321
지역정치인 신뢰	.857	.297	.254
정당의 당원대우 공정성	.799	.241	.266
정당운영의 민주성	.780	.251	.150
주민의견 반영 노력	.254	.677	.122
지역이슈 인지 수준	.125	.824	.113
의회운영 지식 수준	.105	.776	.178
의원직 수행 능력	.222	.809	.375
의원의 지역발전 기여도	.294	.671	.159
공천과정의 경쟁 정도	-.124	.324	.842
공천과정의 민주성	.565	.267	.562
공천결과의 적절성	.468	.273	.629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traction; Varimax Rotation with Kaiser Normalization

6)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지역 발전	인물 신뢰	대우 공정성	운영 민주성	의견 반영	이슈 인지	운영 지식	의원 능력	의원 기여	공천 경쟁	공천 과정	적절 결과
지역발전	1											
인물신뢰	.515**	1										
대우공정성	.484**	.774**	1									
운영민주성	.494**	.713**	.580**	1								
의견반영	.230*	.454**	.317**	.349**	1							
이슈인지	.068	.300**	.298**	.285**	.480**	1						
운영지식	.159	.297**	.337**	.284**	.418**	.603**	1					
의원능력	.189*	.432**	.361**	.374**	.570**	.583**	.564**	1				
의원기여	.216*	.384**	.321**	.439**	.438**	.477**	.521**	.535**	1			
공천경쟁	.039	-.007	.041	.086	.167	.180*	.186*	.131	.068	1		
공천과정	.291**	.555**	.498**	.566**	.284**	.320**	.325**	.399**	.469**	.258**	1	
적절결과	.267**	.440**	.480**	.446**	.380**	.278**	.384**	.300**	.459**	.284**	.676**	1

** P < 0.01 (2-tailed), * P < 0.05 (2-tailed).

Ⅲ. 정당신뢰와 의원효능, 그리고 정당공천에 대한 지방공직자의 인식

1. 가설 1의 검증: 현재지위에 따른 정당신뢰의 차이

정당에 대한 신뢰를 묻기 위해 4개의 변수가 사용되었는데 이들 각 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응답의 평균점은 2.5점 내외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지방공직자들은 정당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평균점이 2.73점으로 4개 변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이어 지역정치인 신뢰 2.53점, 정당의 당원대우 공정성 2.47점, 정당운영의 민주성 2.4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정당신뢰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지위에 따라 정당신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지위는 현직 기초의원, 전직 기초의원, 지방공무원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비교기법(multiple range test)중 Scheffe' test⁷⁾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정당의 지역발전기여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점이 2.73점으로 긍정적이었고 세 집 단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정치인 신뢰(Mean=2.53), 정당의 당원대우 공정성(Mean=3.04), 정당운영의 민주성(Mean=2.96)에 대해서는 현직의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전직의원들 및 공무원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직의원들과 공무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설 1, 즉 지방의원들과 공무원간에 정당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당에 대한 신뢰는 지방의원들과 공무원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현직의원과 다른 두 집단(전직의원과 공무원) 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현직의원들의 신뢰감이 가장 높았고, 공무원, 전직의원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공직자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감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세 개 이상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Duncan's Test와 Scheffe' Test를 사용하는데 Duncan's Test는 집단간 표본수가 같거나 유사할 때 사용하고, Scheffe' Test는 집단간 표본수에 차이가 있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Vogt 1999, 91 & 257).

〈표 2〉 현재지위에 따른 정당신뢰

	현재 지위	Mean	Std. Deviation	N	집단간 차이	
정당의 지역발전 기여 인식	현직의원	2.96	2.73	.980	27	A
	전직의원	2.65		.647	23	A
	공무원	2.64		.673	47	A
지역정치인 신뢰	현직의원	3.22	2.53	.577	27	A
	전직의원	2.09		.596	23	B
	공무원	2.34		.700	47	B
정당의 당원 대우 공정성	현직의원	3.04	2.47	.649	27	A
	전직의원	2.17		.650	23	B
	공무원	2.30		.778	47	B
정당운영의 민주성	현직의원	2.96	2.45	.649	27	A
	전직의원	2.22		.850	23	B
	공무원	2.45		.826	47	B

$\alpha = .05$

2. 가설 2의 검증: 현재지위에 따른 의원효능의 차이

가설 2, 즉 의원들의 효능에 대한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의원들의 효능감에 대해서도 정당신뢰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주민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머지 변수들, 즉 지역이슈에 대한 인지정도, 의회운영에 관한 지식수준, 의원직 수행역량, 지역발전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현직의원들이 나머지 두 집단인 전직의원들 및 공무원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반면 전직의원들과 공무원들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기초의원들의 의원직 수행역량이 가장 낮은 점수(Mean=2.38)를 받았고, 나머지 4개 변수들은 평균점이 2.57~2.68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의원들의 효능에 대한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전체적으로는 현직의원들, 전직의원들, 공무원의 순으로 효능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의원들의 역량에 대한 지방공직자들의 시각이 현재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공무원들이 가장 비판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현재지위에 따른 의원효능

	현재 지위	Mean		Std. Deviation	N	집단간 차이
주민의견 반영정도	현직의원	2.93	2.68	.474	27	A
	전직의원	2.65		.487	23	A
	공무원	2.55		.619	47	A
지역문제 인지	현직의원	2.93	2.63	.616	27	A
	전직의원	2.78		.518	23	B
	공무원	2.38		.677	47	B
의회운영 지식수준	현직의원	2.93	2.64	.550	27	A
	전직의원	2.57		.590	23	B
	공무원	2.51		.688	47	B
의원직 수행역량	현직의원	2.78	2.38	.577	27	A
	전직의원	2.30		.470	23	B
	공무원	2.19		.647	47	B
지역발전 기여도	현직의원	2.96	2.57	.437	27	A
	전직의원	2.57		.843	23	B
	공무원	2.34		.731	47	B

$\alpha = .05$

3. 가설 3의 검증: 현재지위에 따른 정당공천 인식

정당공천에 관한 응답자들의 인식도 앞의 두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공천과정의 경쟁정도에 대해서는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공천과정의 민주성과 공천결과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직의원들이 나머지 두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전직의원들과 공무원들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 살펴보면 공천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현직의원들의 응답은 평균점이 2.70점으로 전직의원들의 평균점 1.87점 및 공무원들의 평균점 2.11점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공천결과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현직의원들의 평균점은 2.74점인데 비해 전직의원들은 평균점 2.04점, 공무원들은 평균점 2.2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현직의원들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공무원들, 전직의원들의 순으로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분산분석 결과는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직의원들의 반응이 세 집단 중 가장 부정적인 것은 이들 대부분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천신청에 참여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정당공천에 대한 분석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전직의원, 현직의원, 공무원 모두 정당공천과정의 경쟁정도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정당공천의 민주성과 결과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직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당공천과정이 합리적 규칙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공천에 탈락한 전직의원들이나 이를 지켜본 공무원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현재지위에 따른 정당공천 인식

	현재 지위	Mean		Std. Deviation	N	집단간 차이
공천과정의 경쟁정도	현직의원	3.00	2.97	.392	27	A
	전직의원	2.96		.878	23	A
	공무원	2.97		.884	47	A
공천과정의 민주성	현직의원	2.70	2.22	.724	27	A
	전직의원	1.87		.757	23	B
	공무원	2.11		.787	47	B
공천결과의 적절성	현직의원	2.74	2.25	.594	27	A
	전직의원	2.04		.767	23	B
	공무원	2.28		.772	47	B

$\alpha = .05$

정당공천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누가 정당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와 정당공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먼저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인물 또는 집단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1~3순위로 복수응답)에 대해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지구당위원장 또는 지구당 유력인사로 57.7%였고, 두 번째로 1순위에 나타난 것은 중앙정치인으로 23.7%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도 역시 지구당위원장 또는 지구당 유력인사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중앙정치인이었다.

<표 5> 정당공천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 또는 집단

	1 순위	2 순위	3 순위	4순위 이하*	1~2 순위 합
중앙정치인	23 (23.7%)	43 (44.3%)	7 (7.2%)	23 (23.7%)	66 (68.0%)
지구당위원장 또는 유력인사	56 (57.7%)	22 (22.7%)	12 (12.4%)	7 (7.2%)	78 (80.4%)
지구당 대의원	4 (4.1%)	21 (21.6%)	34 (35.1%)	38 (39.2%)	25 (25.8%)
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원	3 (3.1%)	5 (5.2%)	36 (37.1%)	53 (54.6%)	8 (8.3%)
일반당원	6 (6.2%)	2 (2.1%)	2 (2.1%)	87 (89.7%)	8 (8.3%)

* 무응답자 포함

이러한 응답결과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이 아래로 부터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구당내 권력자나 중앙정치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정당공천의 이유

	1 순위	2 순위	3 순위	4순위 이하*	1~2 순위 합
당선가능성	42 (43.3%)	20 (20.6%)	9 (9.3%)	26 (26.8%)	62 (63.9%)
정당충성심	24 (24.7%)	37 (38.1%)	28 (28.9%)	8 (8.2%)	61 (62.9%)
유력인사와의 친분관계	20 (20.6%)	18 (18.6%)	37 (38.1%)	22 (22.7%)	38 (39.2%)
재정기여도	8 (8.2%)	17 (17.5%)	20 (20.6%)	52 (53.6%)	25 (25.8%)
기 타	1 (1.0%)	1 (1.0%)	53 (54.6%)	42 (43.3%)	2 (2.1%)

* 무응답자 포함

한편 공천이유에 대해서는 당선가능성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43.3%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1순위에 꼽힌 이유는 정당에 대한 충성심(24.7%)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해 볼 경우에는 당선가능성(63.9%)과 정당에 대한 충성심(62.9%)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기여도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뽑은 응답자는 전체의 8.2%에 지나지 않았고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에도 25.8%로 나타나 공천이유

중 중요성에서 4번째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공직자들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과정에서 금전거래 등과 같은 요인은 중요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당공천의 장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당공천의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후보검증에 기여, 후보자 난립 방지, 정당정책과 의제 명확화, 주민의견 결집반영, 주민참여 확대,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 등 6가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세 집단의 반응 다소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점이 2.6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후보자 검증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직의원들(Mean=2.74점)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전직의원들(Mean=2.3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공무원들(Mean=2.02)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직의원들은 현직의원들이나 공무원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즉 현직의원들은 정당공천이 후보자 검증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지방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7> 정당공천의 장점에 대한 인식

	현재 지위	Mean		Std. Deviation	N	집단간 차이
후보검증에 기여	현직의원	2.74	2.30	.764	27	A
	전직의원	2.35		.573	23	AB
	공무원	2.02		.675	47	B
후보자 난립방지	현직의원	2.89	2.64	.577	27	A
	전직의원	2.48		.790	23	A
	공무원	2.57		.744	47	A
정당 정책과 의제 명확화	현직의원	2.78	2.33	.641	27	A
	전직의원	1.87		.694	23	B
	공무원	2.30		.657	47	C
주민의견 결집 반영	현직의원	2.70	2.33	.542	27	A
	전직의원	2.17		.778	23	B
	공무원	2.19		.711	47	B
주민참여 확대	현직의원	2.63	2.31	.565	27	A
	전직의원	2.00		.674	23	B
	공무원	2.28		.682	47	AB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	현직의원	2.74	2.36	.594	27	A
	전직의원	2.13		.458	23	B
	공무원	2.26		.675	47	B

$\alpha = .05$

정당정책과 의제를 명확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 집단이 각각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의원들(Mean=2.78점)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전직의원들(Mean=1.87점)은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주민의견 결집반영과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 현직의원들(Mean=2.70점 및 Mean=2.74점)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나머지 두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전직의원들(Mean=2.17점 및 Mean=2.13점)과 공무원들(Mean=2.19점 및 Mean=2.26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현직의원은 정당공천이 주민의견을 결집하고 반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현직의원과 공무원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공천이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직의원들(Mean=2.63점)과 전직의원들(Mean=2.00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두 집단 모두 공무원들(Mean=2.28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설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한 현재지위별 응답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고려할 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래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폐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전직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현직의원들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제 유지의견이 37.0%나 되고 반대의견은 59.0%로 나타났다.

<표 8> 현재지위와 정당공천제의 유지여부

	유 지	폐 지	모르겠음	합 계
현직의원	10 (37.0%)	16 (59.3%)	1 (3.7%)	27 (27.8%)
전직의원	1 (4.3%)	20 (87.0%)	2 (8.7%)	23 (23.7%)
공무원	8 (17.0%)	35 (74.5%)	4 (8.5%)	47 (48.5%)
합 계	19 (19.6%)	71 (73.2%)	7 (7.2%)	97 (100%)

IV. 정당공천과 지방의회의 질적발전

세 집단, 즉 현직의원들, 전직의원들, 공무원들은 현재의 지방의회의 발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아래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분석도 앞의 분석들에서 나타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현직의원들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Mean=3.04점)을 보인 가운데 나머지 두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반면에 전직의원들(Mean=2.43점)과 공무원들(Mean=2.40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현직의원들은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전직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응답은 중간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현재지위와 지방의회 발전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현재 지위	Mean	Std. Deviation	N	집단간 차이
지방의회의 질적발전	현직의원	3.04	.518	27	A
	전직의원	2.43	.788	23	B
	공무원	2.40	.742	47	B

$\alpha = .05$

그렇다면 정당공천은 지방의회의 발전에 정말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지방의회의 발전에 대한 정당신뢰, 의원효능과 정당공천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 후 산출된 3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요인점수들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질적발전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10> 참조). 종속변수에 대한 3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순차회귀분석(Stepwise Analysis)을 실시하여 3개의 회귀식을 얻었다.

〈표 9〉 지방의회 질적발전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표

모형	독립변수	b	β	t	Sig.	R	R ²	Adj. R ²	F	Sig.
1	회귀상수	2.588		40.009	.000	.529	.280	.272	36.866	.000
	정당공천	.395	.529	6.072	.000					
2	회귀상수	2.588		45.442	.000	.669	.447	.436	38.055	.000
	정당공천	.395	.529	6.896	.000					
	의원효능	.306	.410	5.343	.000					
3	회귀상수	2.588		48.225	.000	.717	.515	.499	32.682	.000
	정당공천	.395	.529	7.319	.000					
	의원효능	.306	.410	5.671	.000					
	정당신뢰	.193	.259	3.587	.001					

Stepwise Analysis with 3 Independent Variables: 정당공천, 의원효능, 정당신뢰

분석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Beta β)의 값이 정당공천 .529, 의원능력 .410, 정당신뢰 .259로 나타나 세 요인 모두 지방의회의 질적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당공천이었고, 다음은 의원효능, 정당신뢰의 순이었다. 특히 정당공천은 R 값이 +로 나타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 〈표 10〉의 모형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당공천과 의원효능의 두 독립변수가 지방의회의 발전을 43.6%(Adj. R²= .43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정당신뢰를 포함할 경우 49.9%(Adj. R²= .49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방공직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정당공천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V. 맺는 말: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에 대한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원들과 공무원의 정당에 대한 신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고, 의원들의 효능에 대한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도 채택되었다. 정당공천에 대해 지방의원과 공무원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3도 채택되었다. 그러나 정당공천은 지방의회의 발전과 부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4는 기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신뢰와 정당공천은 현직의원들, 공무원들, 전직의원들의 순서로 낮

았고, 의원효능은 현직의원들, 전직의원들, 공무원들의 순으로 낮았다. 공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로서는 지구당위원장 또는 지구당 유력인사와 중앙정치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 즉 연령, 학력, 소득 등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정당공천의 장점에 대해서는 현직의원들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반면에 전직의원들과 공무원들은 부정적은 아니지만 중립 또는 미미한 수준의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정당공천제의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전직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직의원들의 경우 폐지의견이 많았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지난 5·31 선거 이후 지방의회가 과거 의회보다 질적으로 발전했는가에 대해서는 현직의원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전직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중립에 가까운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종합적으로는 정당공천이 지방의회의 질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원효능감과 정당신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방공직자들의 정당신뢰나 의원효능감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당공천을 통해 지방선거의 주요 후보자가 선정되고 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들이 지방의정활동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데 전현직 기초의원들과 지방공무원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도와 의원들의 효능감이 낮다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 정당공천이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공직자들은 정당공천이 지방의회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정당공천이 지방의회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은 기존의 연구나 민선지방공직자(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통해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당공천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적절한 후보가 선정된다면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분석결과에 나타나듯이 정당공천의 민주성이나 공천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중간점수(Mean=2.5) 이하로서 현재의 정당공천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결과도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공천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정당공천제를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연구와 정치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만일 유지해야 한다면 지방의원 정당공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당공천과정에서의 경쟁이 치열했다는 점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없음에도 공천과정의 민주성과 결과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둘째, 의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정당공천제와 지방의회에 관한 실험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지역이 한 개의 광역시로 한정되었고, 분석대상자의 수가 97명으로서 표본 수가 적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기법 적용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동일한 연구분석틀에 기초한 과거의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곤란하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행위주체들인 전현직 기초의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하거나 집합자료 분석 또는 질적인 방법의 병행을 통한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된 연구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병준 (2002).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서울: 법문사.
- 김상미 (2006). 지방의회의 역할정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enabling 정부를 중심으로. 「정부학 연구」 12(2): 245-281.
- 김순은 (2002). 지방의회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부산광역시의 2001년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2002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41-47.
- 모종린·전용주 (2004). 후보경선제, 본선경쟁력 그리고 정당민주화: 2002년 6·13 기초자치 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1): 233-253.
- 박희봉·이희창 (2005). 개인의 가치가 정부신뢰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 비교. 「한국행정연구」 14(4): 3-38.
- 송광태 (2005). 개정 지방자치관련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국공공 관리학보」 19(1): 159-176.
- 안병만 (198). 농촌주민의 정치적 태도: 정치효능과 정치신뢰. 「한국정치학회보」 17: 135-146.
- 육동일 (2006).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 지방자치학회보」 18(1): 5-26.
- 이상묵 (2007). 지방선거제도 변화의 정치적 효과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1): 53-70.
- 이상팔 (2002). 대리인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의 활성화 조건. 「지방행정연구」 18(1): 51-77.
- 이승중 (2005). 개정선거법에 대한 논평. 「지방자치」 202호. 미래한국재단.
- 이현우 (2006).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 평가: 대표성, 민주성, 자율성. 「세계지역연구논총」 24(3): 219-245.
- 조경호·김명수 (1995). 한국 기초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과 입법전문성 평가. 「한국행정학보」 29(1): 231-260.
- 조성대 (2003).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지역주의 정당경쟁과 광역의회의 활동. 「21세기정치학회보」 13(1): 259-274.
- 주용학 (2007). 민선4기 지방선거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1): 29-51.
- _____ (2002).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43-69.
- 최병대·송광태 (1995).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7(2): 123-150.
- 최봉기 (2005). 한국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제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1): 5-25.

- 최봉기·이동수 (2003). 제7차 지방의원선거분석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2): 5-31.
- 최홍석 (2003). 지방정부의 책무성과 지방의회. 「지방행정연구」 17(3): 131-171.
- 황아란 (2007). 기초 지방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적 효과: 실패한 제도개혁. 「지방정부연구」 11(1): 7-28.
- _____ (2002).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경선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행정연구」 16(1): 97-114.
- _____ (2002). 지역주의와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한국행정학보」 36(2): 129-144.
- Abramson, P. R. & A. W. Finifter (1981). On the Meaning of Political Trust: New Evidence from Items Introduced in 1978.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2): 297-307.
- Almond, G. A. & S.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Berry, William D. & Stanley Feldman (1985).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Series: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Easton, David & J. Dennis (1967).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 28-29
- Erickson, R. S. & K. L. Tedin (2001). *American Public Opinion*, (6th Ed.). NY: Priscilla McGeehon.
- Knoke, D., G. W. Bohrnstedt, & A. P. Mee (2002). *Statistics for Social Data Analysis*. Itasca, IL: F. E. Peacock.
- Robbins, J. R., P. R. Shaver, & L. S. Wrightsman (1999).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Sandiego, CA: Academic Press.
- Vogt, W. Paul (1999). *Dictionary of Statistics & Methodolog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